

윤석열정부 경제정책 평가 시리즈

# We Crashed ③

## 우리 **재정**은 폭망했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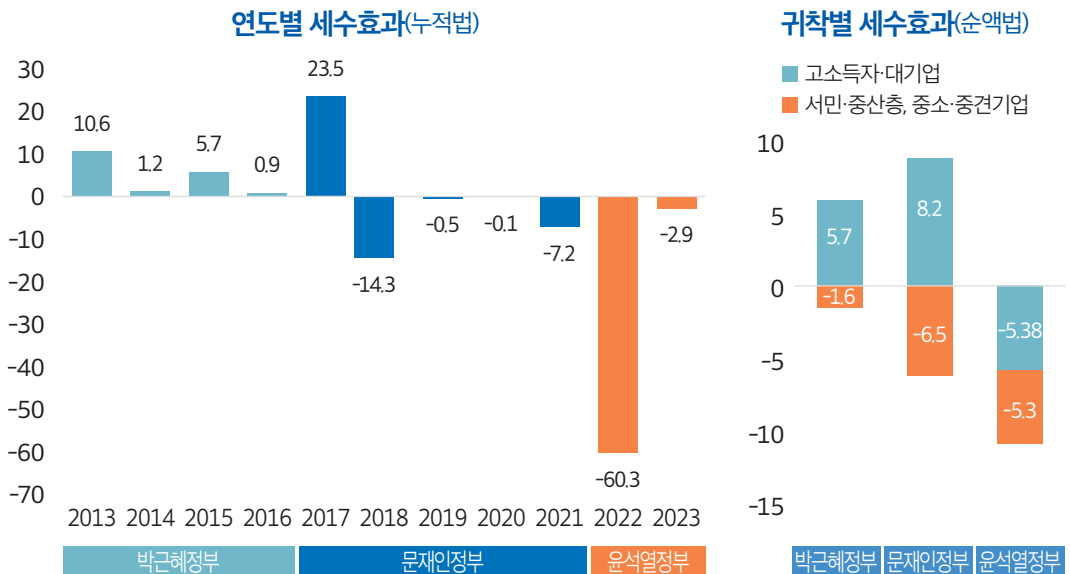
# 무력대고 부자감세



## “슈퍼법인, 주택부자, 주식부자 ...” 트리플 부자감세 추진

- 2022년과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총액(누적법) : 63조원  
- 세목별 감세액 : 법인세(27조원), 소득세(19조원), 종합부동산세(7조원) 등
- 귀착별 세수효과(순액법) : 서민·중산층, 중소·중견기업(5.27조원)보다  
고소득자와 대기업(5.38조원)에게 더 큰 규모의 감세 혜택 제공

역대정부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(조원)



### • 재정민주주의 원칙 1 •

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재정을 위해서는 세제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 
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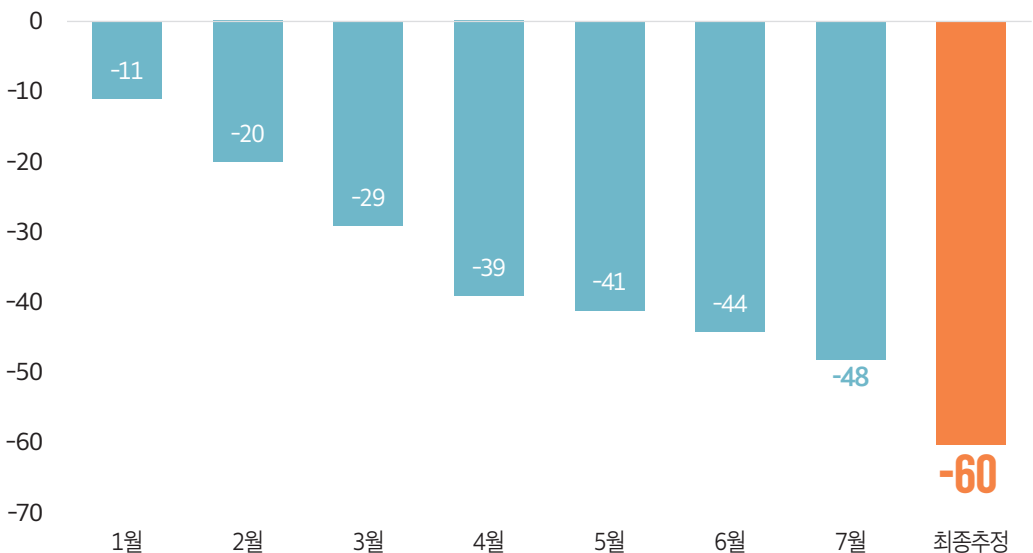
## 역대급 세수폭망



### “400만원이라더니, 실제 월급은 340만원” 세수결손 60조원 예상, 1998년 외환위기 이상의 재정혼란

- 2023년 7월 세수결손 48조원\* : 법인세 -19조원, 소득세 -16조원 등  
\* 전년대비 예산 증액 4.6조원 + 전년대비 실적 감소 43.4조원
- 예상했던 국세수입 400조원 중 60조원 부족할 것으로 추정
- 1998년 외환위기(-11.8%)를 초과하는 역대급 세수오차율 -15%\*  
\* 예상했던 세수 대비 오차 비율 :  $-15\% = 60\text{조원} \div 400\text{조원(예산)}$
- 본격적인 감세효과는 올해 말 중부세부터 발생

2023년 역대급 세수결손 (조원)



자료 : 기획재정부 월별 국세수입 현황

## 분식회계 재정운용



### “올해 국가부채만 아니면 돼. 내년부터 빚으로 잡히겠지” 외평기금에서 40조원 갖다 쓰기

- 2023년 : 세수결손 60조원 중 20조원은 외평기금\*에서 조달  
\* 기재부가 관리 주체이나, 실무는 한국은행이 담당
- 2024년 : 세입예산 20조원을 외평기금에서 조달  
‘원화표시 외평채’\* 18조원을 21년만에 발행 → 국가채무 증가 반영  
\*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 발행, 2003년 11월 발행 중단

#### 2023년 세수결손 처리방법

지방이전 자동감소	지출 감축	세계 잉여금	기금 여유자금	외평기금
24조원	16조원			20조원
	10조원	3조원	3조원	

- 현재 : 기재부 재정수지 미반영, 외평기금 20조원 감소  
미래 : 외평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18조원 추가
- ① 외평기금 : 20조원 감소(23년)
- ② 기획재정부 재정수지 변화 없음 : 늘어난 20조원을 지출에 사용(23년)
- ③ ‘원화 외평채’ 발행 : 국가부채 18조원 책임(24년)

#### 2023년 기재부의 외평기금 활용에 따른 결과 (조원)

	수입	지출	수지	비고
외평기금	-	20	-20	저량(stock) 개념. 원화 외평채 발행 시 국가채무 증가
공자기금	20	20	-	유량(flow) 개념. 증가한 20조원을 지출에 사용. 재정수지에 영향 없음
전체	20	40	-20	국가부채 20조원 증가(24년 18조원, 이후 2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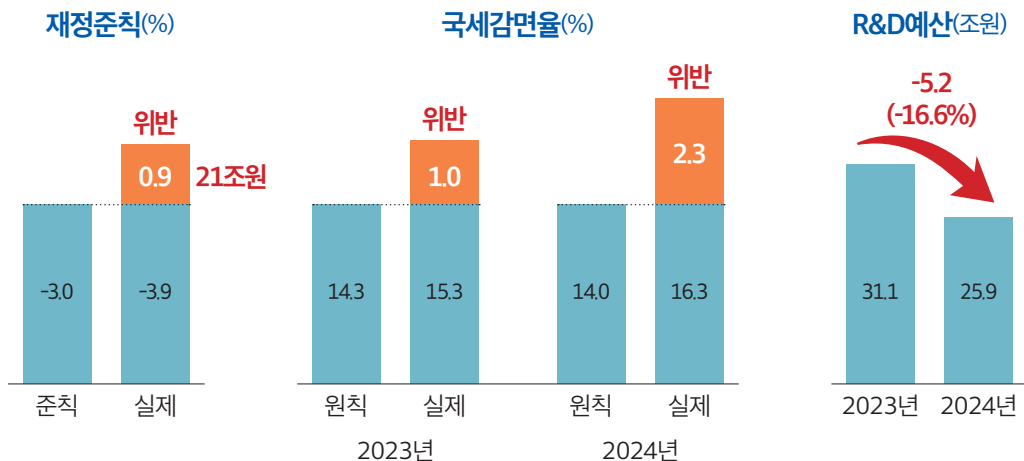
## 이율배반(二律背反) 예산



1. 재정준칙 주장하면서, **재정준칙 위반**
2. 국세감면제도, **2년 연속 위반**
3. 미래대비 주장하면서, **R&D예산 삭감**

- 재정준칙(관리재정수지  $\pm 3\%$  이내)을 지키려면 총지출 21조원 삭감 필요  
→ 예산이 636조원으로 감소, 전년(639조원)대비 마이너스
- 국가재정법에 이미 있는 재정건전화 제도 ‘국세감면제도’\* 2년 연속 위반  
\* 조세감면이 큰 폭으로 늘어 국가재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어하는 제도
- R&D예산 2023년 31조원에서 2024년 26조원으로 5조원(-16.6%) 삭감

### 이율배반(二律背反) 3대 예산



자료 : 2024년도 예산안, 조세지출예산서, 2023~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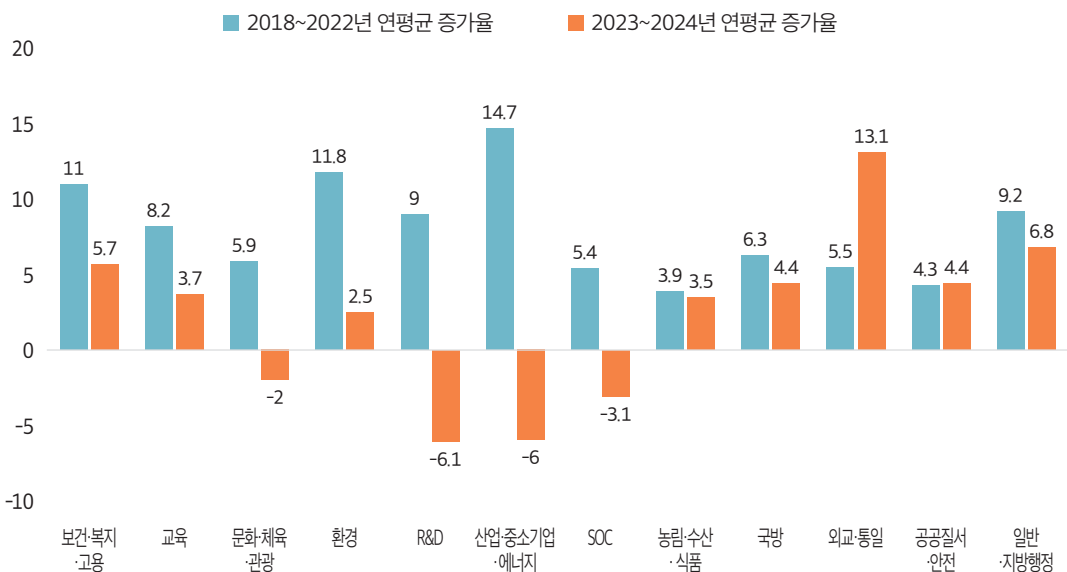
## 미래포기 예산



### “예산을 보면 정책이 보인다고 했는데” 성장, 에너지,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

- 총지출예산 증가율 : ('22년) 8.9% → ('23년) 5.1% → ('24년 예산안) 2.8%
-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 vs 2023~2024년 연평균 증가율
  - 산업·중소·에너지 -20.7%p, R&D -15.1%p, 보건·복지·고용 -5.4%p
  - 2023년 예산 대비 교육 -6.6조원, R&D -5.2조원

분야별 예산 연평균 증가율 비교 (%)



주 : 2018~2023년은 본예산 기준, 2024년은 예산안 기준  
자료 : 연도별 정부 예산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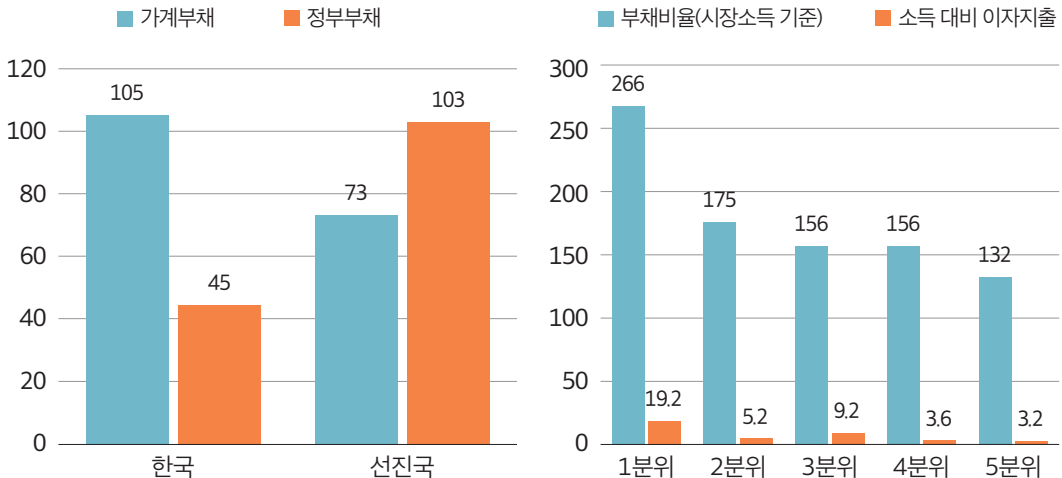
# 부유한 정부, 가난한 국민



## “국민은 가계부채와 저소득 복합위기인데” 尹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

- 가계부채비율(GDP대비, 2022년) : 한국 105% > 73% 선진국  
정부부채비율(GDP대비, 2021년) : 한국 45% < 103% 선진국
- 시장소득 대비 이자 : 1분위 19.2%, 2분위 5.2%, 3분위 9.2% ... 5분위 3.2%
- 소득 1분위(하위소득 20%)의 시장소득 대비 부채비율 : 266%

가계부채 vs 정부부채 (%)



자료 : BIS statistics, 통계청 가계금융·복지조사

### • 재정민주주의 원칙 2 •

서민·중산층의 가계부채 축소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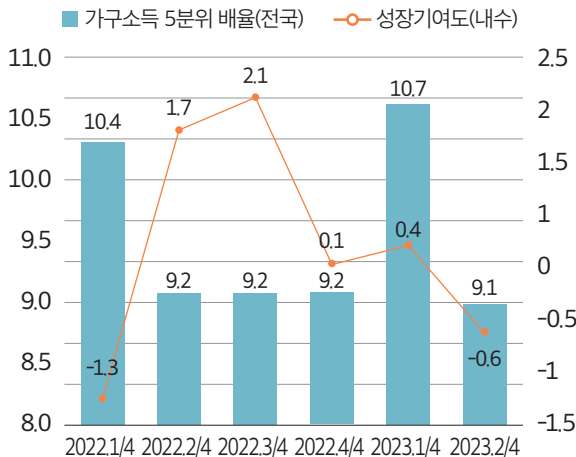
## 불평등 저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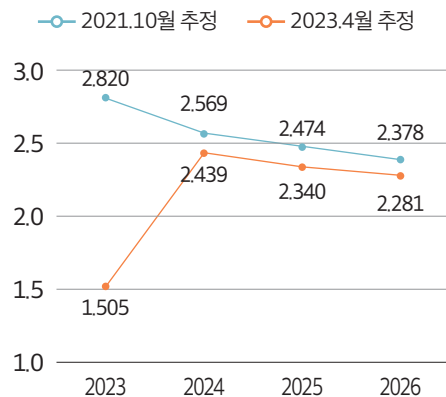
### “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고집으로” 확대되는 소득불평등, 하락하는 경제성장률

- 가구소득 5분위 배율 : (‘22.2분기) 9.2 → (‘23.1분기) 10.7, (‘23.2분기) 9.1
- 소득불평등 확대로 내수 성장기여도는 2022년 3분기 이후 하향 추세  
- (‘23.3분기) 2.1%p → (‘23.4분기) 0.1%p → (‘23.1분기) 0.4%p → (‘23.2분기) -0.6%p
- 2021년 10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아진 2023년 4월 전망치  
- (‘24년) 2.57%→2.44%, (‘25년) 2.47%→2.34%, (‘26년) 2.38%→2.28%

불평등 저성장 (배수, %)



경제성장률 전망치



자료 :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, 통계청 가계동향조사(1인 이상 가구 기준), IMF World Economic Outlook

#### • 재정민주주의 원칙 3 •

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낙수효과가 아닌 분수효과이므로  
성장률 제고를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정의 재분배기능을 강화해야 한다.



# 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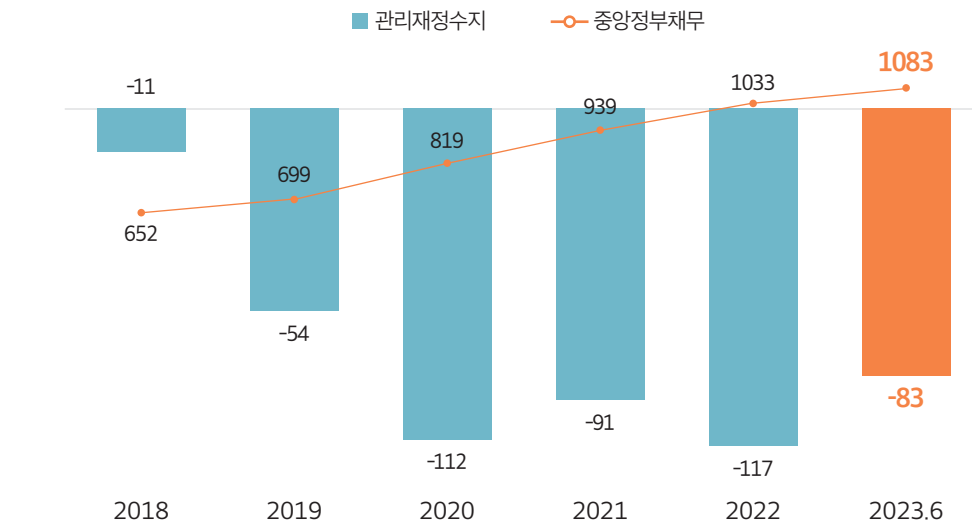


“낙수는 모르겠고”

떨어지는 재정건전성

- 부자감세 → 재정적자 확대 → 국가채무 증가 → 부실한 채무구조  
 - 2023년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55조원 적자, 관리재정수지 83조원\* 적자  
 \* 적자성 채무 비중 : ('21년) 61.6% → ('22년) 63.5% → ('23년) 63.6% → ('24년) 64.0%
- 긴축재정 → 저성장 → 세입·세출 전망치 하향조정 → 재정적자 확대 → ...

낙수에 무너진 건전재정 (조원)



자료 :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

## • 재정민주주의 원칙 4 •

경기침체기의 긴축정책은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므로 정부는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.

# 尹정부야, 정답은 분수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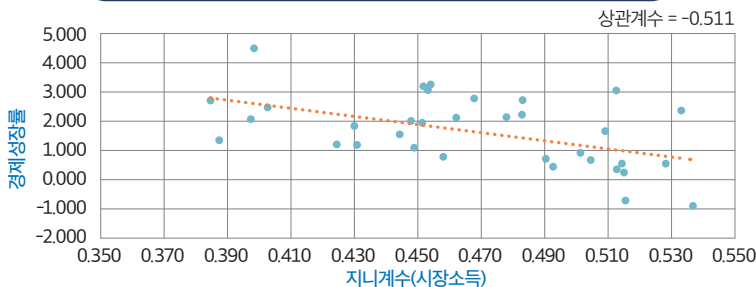


## "낙수효과가 답이라고?"

##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은 분수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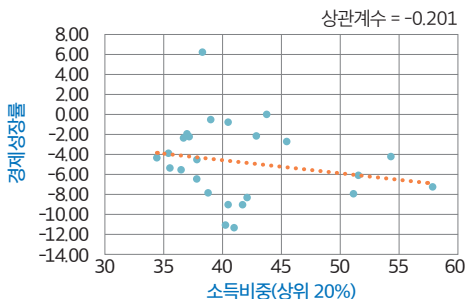
- 시장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.511  
: 소득불평등이 개선되면 성장률은 높아진다
- 상위 20%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 하락(상관계수=-0.201)  
하위 40% 소득집단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면 성장률 증가(상관계수=0.277)

###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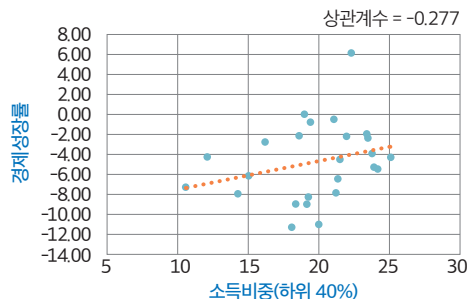


주 :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은 2012~2020년 OECD 회원국 평균값

자료 : OECD statistics



자료 : OECD statistics, World Bank, World Development Indicators



### • 재정민주주의 원칙 5 •

분배구조의 개선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차원을 넘어  
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.